

반복되는 코스닥 대형주 이탈 ‘코스피 2부 리그’ 우려 커져

시총 1위 알테오젠 이전상장 결정
몸집 커지면 코스피 도전 이어져
증권가 “‘한국형 나스닥’ 갈 길 멀어”

“알테오젠이 떠나네요. 요즘 코스닥 투자자들의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투자자 A씨(37)는 “코스닥은 도대체 ‘장부’(장기투자)를 할 수가 없는 시장”이라며 이같이 털어놨다. 코스닥 시가총액이 12월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시총 1위 기업 마쳐 시장을 등지자 ‘천스탁’(코스닥 1000)이 요원해 보인다는 것이다. 25년 전 짹은 최고점(2,834.40)은 더욱 갈 길이 멀어.

8일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 결정 소식에 ‘코스닥 개미’들은 더욱 심란하다. 코스닥 대형주들의 잇따른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살아나던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큰돈을 장기간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으니 주가가 꾸준히 오르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 알테오젠, 이전 상장 저주 풀리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알테오젠은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시장 조건부 상장 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 결의의 건’을 의결했다.

알테오젠은 순차적으로 유가증권시

장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후 상장 절차를 거친 뒤 내년 중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앞서 알테오젠은 공시를 통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목적을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할 시 시가총액 30조원 이상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알테오젠의 시총을 감당할 시장이 있다면 30조원 이상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할로자임을 예로 들면, 알테오젠은 로열티 수익으로 분기당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영업이익률도 분기당 50%를 초과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 정부 코스닥 활성화 정책 찬물 끼얹나

정부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이다. 금융 당국이 구체안을 마련 중인데,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 부동산으로 못 가는 개인 투자금을 끌어오거나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지난 7월 말 코스닥협회·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은 국민연금이 보유 자산의 3%를 코스닥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300조원 넘는 운용 자산 중 3%면 약 40조원 가량이다.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의 8%에 달

한다.

그러나 대형주의 잇따른 이전 상장으로 시장에서는 ‘코스피 2부 리그’ 우려가 다시 제기된다. 그동안 코스닥이 힘을 받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 이유는 투자할 종목이 마땅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어느 정도 몸집이 커지면 코스피 시장으로 ‘출가’ 하는 일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와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코웨이, 포스코DX 등은 모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이다.

이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구글,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테슬라 등 뉴욕 증시를 주도하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M7)’이 모두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아닌 나스닥에 상장된 것과는 대조된다. 코스닥은 본래 기술 중심의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며 1996년 출범했다. 하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한국의 나스닥’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스닥시장 대형 기업의 이전상장은 다른 이전 상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계속되는 이전상장은 코스닥시장의 투자자 기반과 상장기업 기반을 위축시키고, 국내 모험자본 순환체계의 핵심 인프라로서 위상과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신한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보안 무너진 이통3사… 한해 장사 망쳤다

올해 초부터 보안 참사 줄이어
사태 수습 등 수익성 악화 불가피

2025년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보안 재앙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8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내 통신 3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유심(USIM) 해킹부터 통화 내역 유출까지 연쇄적인 보안 참사를 일으키며 실적 충격과 함께 정부의 ‘ISMS-P 전면 수술’이라는 규제 역풍을 동시에 맞았다.

보안 사고의 시작은 SKT였다. SKT는 지난 4월,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2324만 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암호키(KI) 등이 유출됐다. 통신의 핵심이자 ‘디지털 신분증’이나 다른 유심 정보가 통째로 털린 이사고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단일 기업 역대 최대 규모인 135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KT는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터졌다. 해커들이 KT의 관리망 밖에 방치된 조소형 기지국(펩토셀)을 통해 가입자 2만 2227명의 정보를 탈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증서 재사용, 암호화 미비 등 보안 수칙 위반 확인됐고, 일부 가입자는 금전 피해(스마싱 등)까지 입었다. KT는 사고 인지 후 당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한 484억 원에 그쳤다. 5000억 원에 달하는 고객 보상 패키지(요금 감면, 데이터 제공) 비용과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일시에 반영된 결과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SKT 사태의 반사이익으로 가입자가 유입되며 매출이 소폭 상승했으나, 이는 ‘폭풍 전야’에 불과하다. KT는 해킹 피해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 비용이 4분기부터 본격 반영될 예정이며, LG유플러스 역시 익시오 사태 수습과 희망퇴직 비용(약 1500억 원)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연달아 일어난 개인정보유출 사태는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통신사들의 무리한 ‘탈(脫)통신’ 전략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한다. 3사 모두 AI(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UAM 등 신사업에 조 단위 투자를 쏟아부으며 ‘AI 컴퍼니’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사이, 본업인 통신망 관리와 보안이라는 기초 체력을 부실해졌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AI 전환은 글로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과제인데, 사고가 터졌다고 해서 이를 두고 ‘기본을 소홀히 했다’고 매도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BNK금융, 차기회장에 빈대인 후보 추천

빈대인 회장, 사실상 연임 성공



스트 공개 이후 빈대인 회장의 연임 가능성은 높게 점쳐왔다.

빈 회장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부산 동래원예고와 경성대법학과 졸업 후 1988년 부산은행에 입행했다.

8일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빈대인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이광주 BNK금융 이사회 의장은 “(빈 회장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재무적 성과를 거뒀으며 지역 경기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남아있음에도 속속 가능한 경영과 조직 안정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업(기업 가치 제고)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추위는 빈 회장과 방성빈 부산은행장,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 안감찬 전 부산은행장 등 4명을 차기 회장 속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업계에선 솟리

/김주형 기자 gh471@

내년 서울~수서 KTX·SRT 통합운영

국토부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발표

투입하는 방식이다.

교차 운행에 대비해 새로운 구간에 투입되는 기관사의 예비운행 구간 면허를 취득하고, 안전성 검증을 비롯한 영업준비를 마치면 내년 3월부터 교차운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코레일톡과 SRT 앱으로 나뉜 예약·매수 시스템도 통합한다. 두 앱에서 열차표를 검색하면 KTX와 SRT를 불문하고 가까운 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수서역 SRT의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통합에 나선다. 그 시작으로 내년 3월부터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 교차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20량, 955석 규모로 SRT보다 좌석 수가 많은 KTX-1 차량을 수서역에 투입해 운행하고, SRT 열차도 서울역 출발을 하는 등 기종점 구분없이 교차 운행률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어 코레일과 SR 고속 차량을 구분하지 않고 복합 연결하고, 기종점 구분 없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해 좌석 공급을 더 늘리기로 했다.

KTX와 SRT 통합 편성·운영을 하게 되면 서울~부산의 기존 노선 외에도 서울~수서~포항~부산으로 연결돼 차량 운용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뉴스

대만선 친소비자 정책… 韓 역차별 논란도

» 1면 ‘유출 아닌 노출로…’서 계속

쿠팡의 한국 내 로켓배송 등 프로덕트커머스 매출은 전체의 88%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지만, 이미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텃에 소비자 보호보다는 면책 조항 강화 등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최근 시장 개척에 나선 대만에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다. 대만 쿠팡 약관에는 “모호한 부분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국내에는 없는 생체 인식 보안 ‘패스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친소비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결국

‘잡은 물고기’인 한국 소비자에게는 책임을 회피하고, 신규 시장인 대만 소비자에게만 공을 들이는 역차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미국 증시에서도 책임 회피에 나선 쿠팡은 집단소송이라는 직격탄을

맞이하게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는 중대한 보안 사고 발생 시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지만, 쿠팡은 3370만명이라는 대급 유출 규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뒤늦게 ‘유출’ 사실을 재공지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쿠팡이 법적 분쟁과 주가 방어를 위해 사태의 중대성 판단을 미루며 시간을 끄는 사이 시장의 불신은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뉴욕 소재 로펌 DJS Law 그룹은 “쿠팡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겼는지 검토하겠다”며 손실을 본 주주 모집에 착수했고, 국내 법무법인 대륜 역시 미국 현지 법인과 연계해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검토하는 등 쿠팡의 ‘침묵 전략’은 소비자를 빛나게 만들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손종욱 기자 handbell@